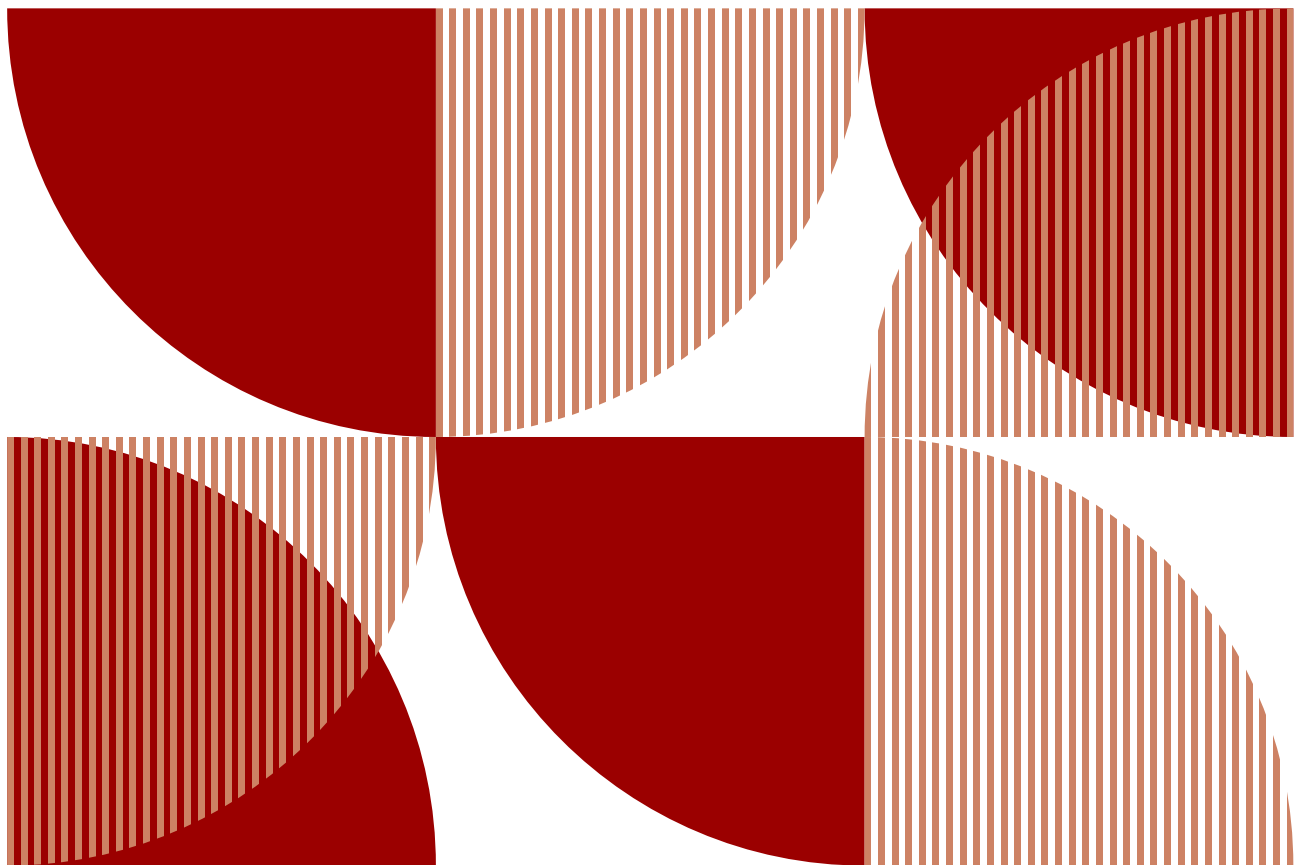


숲은 베면서 지킨다

: 지속가능한 임업의 세계적 흐름과 산주의 선택



목차

- 03 들어가며: 산주 220만 명, 평균 1.86ha
- 04 지속가능한 임업은 무엇인가: 보전이 아니라 경영
- 06 세계의 다섯 흐름: 인증·탄소·생태계서비스·규제·유기 임산물
- 08 사례 깊이 보기: 핀란드·일본·미국·코스타리카·독일
- 10 한국의 제도: 부품은 있고 조립이 없다
- 11 산주·인증기관·정책에의 시사점
- 12 참고자료

들어가며: 산주 220만 명, 평균 1.86ha



한국의 사유림 산주는 220만 1천 명이다. 산림청이 2026년 7월 발표한 2025년 전국 산주 현황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1.86ha이고, 3ha 미만을 가진 산주가 86.3%이며, 50대 이상이 88.4%이다. 산이 있는 시·도에 사는 산주는 44.2%에 그친다. 작고, 나이 들었고, 멀리 산다. 이 세 가지가 한국 임업의 출발 조건이다.

그런데 산주가 산에서 돈을 벌 길은 넓어지고 있다. 세계는 산림을 인증·탄소·생태계서비스·친환경 임산물이라는 네 개의 시장으로 연결하는 제도를 경쟁적으로 넓히고 있고, 한국에도 같은 부품이 대부분 들어와 있다. 임업직불제, 산림탄소상쇄제도, 한국산림인증제도(KFCC)^[1], 유기 임산물 인증이 그것이다. 문제는 부품이 아니라 조립이다. 임업직불금을 받는 산지는 2024년 6만 5천ha로 사유림 415만ha의 1.6%에 불과하다.

이 글은 지속가능한 임업의 세계적 흐름을 산주의 관점에서 정리한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임업은 벌채 금지가 아니라 계속 수확할

수 있게 경영하는 것이다. 핀란드는 산주 62만 명이 평균 30.5ha를 가지고 2025년 한 해 임목 판매수입 37억 유로를 벌었다. 사유림이 국내 벌채의 80%를 낸다.

2. 세계는 산림의 공익 기능에 값을 매기는 제도를 넓히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30년째 산림 보호에 ha당 돈을 주고, 독일은 2025년 한 해 산주 8,700명에게 1억 4,600만 유로를 지급했으며, 미국의 가족산림 탄소 프로그램은 누적 5,600만 달러를 지급했다.

3. 규제는 금지가 아니라 시장 진입 조건이다.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EUDR)^[2]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목재의 출처 좌표를 요구한다. 경영계획과 기록이 있는 산주에게 규제는 문턱이 아니라 해자이다.

[1]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한국산림인증제도. 한국임업진흥원이 운영하며 PEFC와 상호인증됐다.

[2] 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 산림전용 방지 규정, Regulation (EU) 2023/1115. 소·목재·코코아·대두·팜유·커피·고무와 그 파생제품이 대상이다.

지속가능한 임업은 무엇인가: 보전이 아니라 경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3]의 표준 정의는 유럽산림장관회의(FOREST EUROPE)가 만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4]가 채택한 문구이다. “산림의 생물다양성·생산성·재생 능력·활력,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생태적·경제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과 속도로 산림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 핵심은 ‘이용’이 정의 안에 있다는 점이다. 유엔 총회가 2007년 채택한 산림 문서(UN Forest Instrument)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를 “모든 유형의 산림이 지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적었다. 보전은 세 가치 중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다.

이 정의를 측정 가능하게 만든 것이 1995년 산티아고 선언의 몬트리올 프로세스 7기준이다. 생물다양성, 생산 능력, 건강성, 토양·수자원, 탄소순환, 사회경제적 편익, 법·제도의 일곱 기준으로 온대·한대림 국가 12개국이 자국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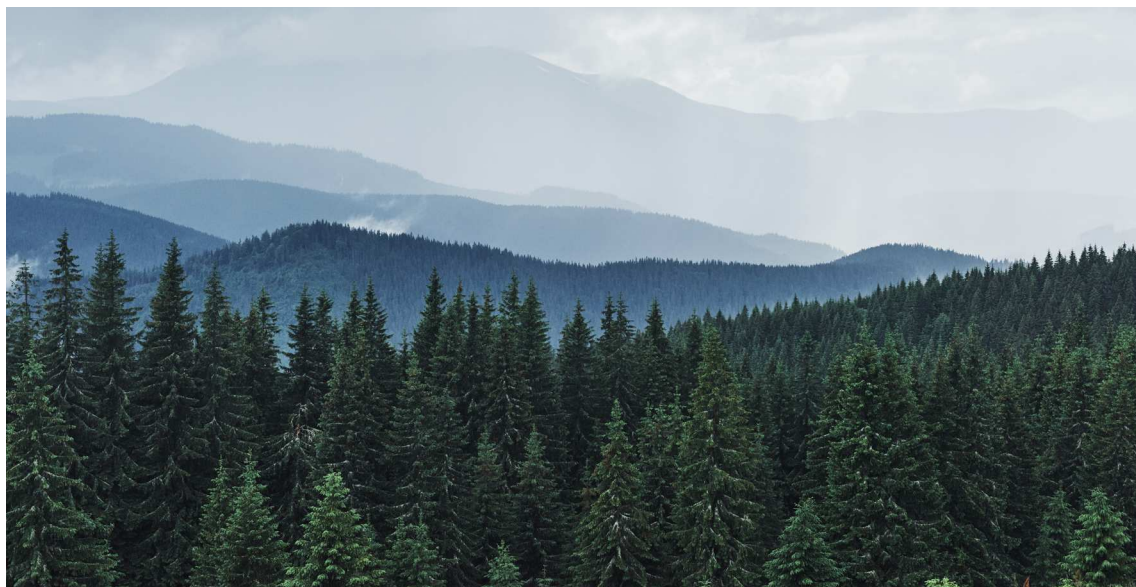
림을 보고하며, 한국은 정회원국이다. 생산 능력과 사회경제적 편익이 일곱 기준 가운데 둘을 차지한다.

세계 산림의 현황이 이 정의의 배경이다. FAO의 세계산림자원평가(FRA)^[5] 2025에 따르면 세계 산림은 41.4억 ha로 육지의 32%이고, 산림파괴(deforestation) 속도는 1990년대 연 1,760만ha에서 2015~2025년 연 1,090만ha로 줄었다. 관리계획이 있는 산림은 55%로 늘었고 유럽은 94%에 이른다. 산림을 지키는 나라들은 산림을 묶어 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 경영했다.

[3]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4]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 식량농업기구.

[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FAO가 5년마다 내는 세계 산림자원평가.



[표1] 세계 산림의 변화(FRA 2025)

구분	1990~2000	2000~2015	2015~2025
연평균 산림파괴	1,760만ha	1,360만ha	1,090만ha
연평균 순감소	1,070만ha	368만ha	412만ha
관리계획 보유 산림 (2025)	55% (유럽 94%)		
보호구역 내 산림(202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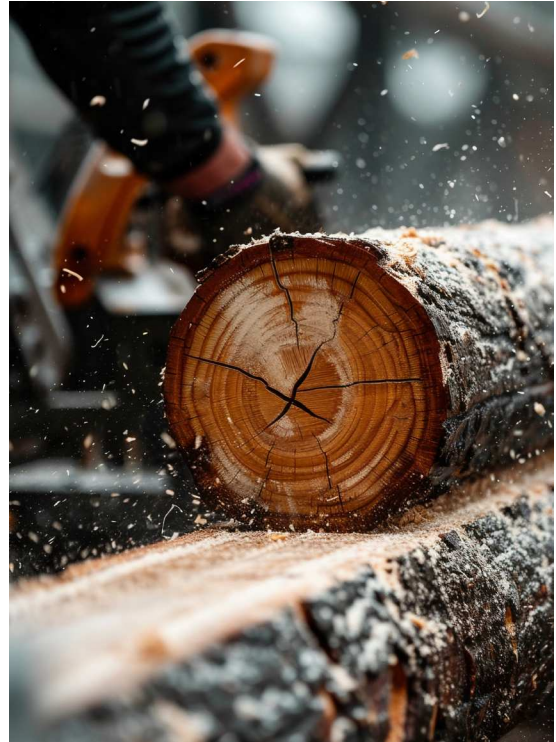
(출처: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25.)

지속가능한 임업의 세부 방식으로 유럽에서 퍼지는 것이 근자연 임업(CCF)^[6]이다. 숲을 한꺼번에 베는 개별(모두베기) 대신 나무를 골라 베어 임분을 항상 여러 나이의 나무로 유지한다. 벌채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벌채를 매년 조금씩 하는 방식이며, 산주에게는 목재 수입이 한 세대에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들어오는 경영 모델이다. 유기 임산물은 또 다른 갈래이다. 유기농업연구소(FiBL)^[7]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8]의 2026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유기 야생채취 면적은 2,550만ha이며, 핀란드가 690만ha(주로 베리류)로 세계 최대이다. 핀란드 산림의 상당 부분이 유기 인증 채취지라는 뜻이다.

[6] Continuous Cover Forestry. 근자연 임업. 개별 없이 택별로 임분을 항상 여러 영급의 나무로 유지하는 경영 방식.

[7] Forschungsinstitut für biologischen Landbau.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

[8]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nfo] 이시도르 박사의 Insight Box

산주들이 “지속가능”이라는 말에서 먼저 떠올리는 것은 벌채 제한이다. 한국의 경험이 그렇게 만들었다. 2021년 산림청은 모두베기 상한을 50ha에서 30ha로 줄이고 20ha 초과 벌채는 민관합동심의회를 거치게 했으며, 보호지역 167만ha에서는 모두베기를 금지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경제림 중심의 산림순환경영과 목재 이용 활성화를 실행 전략에 넣었고, 2025년의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은 목재자급률을 2023년 18.6%에서 2029년 27%로 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정책의 방향은 ‘덜베기’가 아니라 ‘계획대로 베고 국산재를 더 쓰기’이다. 세계의 흐름과 같다.

세계의 다섯 흐름: 인증·탄소·생태계서비스·규제·유기 임산물

세계가 산림을 돈이 되게 만드는 방식은 다섯 갈래로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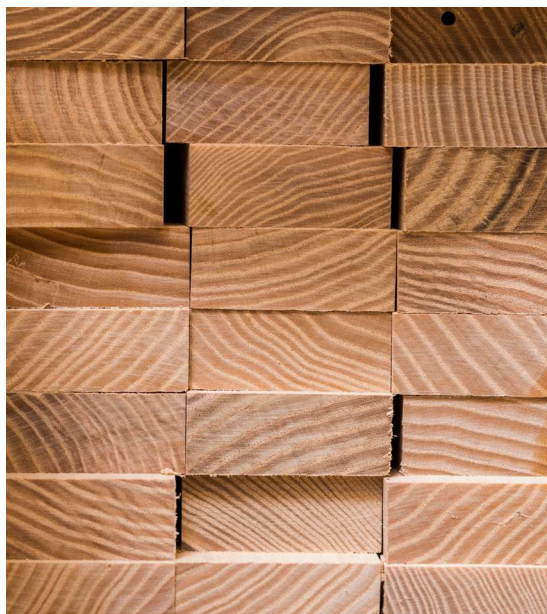
[표2] 지속가능한 임업을 촉진하는 세계의 다섯 흐름

흐름	대표 제도	산주에게 돈이 되는 방식	규모(기준 시점)
인증	PEFC ^[9] , FSC ^[10]	인증재의 시장 접근·공공조달	약 4억ha (중복 제외, 2026)
탄소	NZ ETS ^[11] , J-크레딧, 미국 FFCP ^[12]	흡수량을 크레딧으로 판매	미국 누적 5,600만 달러 (2026)
생태계 서비스	코스타리카 PSA ^[13] , 독일 KWM ^[14]	보호·경영 이행에 ha당 지급	독일 170만ha ·1.46억 유로 (2025)
규제 ·기준	EUDR, EU CRCF ^[15]	출처 증명이 곧 수출 자격	EUDR 적용 2026.12.30
유기 임산물	유기 야생채취 인증	베리·버섯·약초의 유기 프리미엄	2,550만ha, 핀란드 690만 ha(2024)

(출처: PEFC Global Statistics(2026.3), FSC, American Forest Foundation, FNR, EU 관보, FiBL·IFOAM(2026))

인증

PEFC는 2026년 3월 기준 2억 9,540만ha, FSC는 1억 6,500만ha 이상을 인증했고 6,300만ha는 양쪽 모두에서 인증됐다. 중복을 빼면 약 4억ha, 세계 산림의 10% 안팎이다. 국가별로는 캐나다가 1억 2,789만ha로 가장 크고 미국 3,323만ha, 핀란드 1,727만ha, 스웨덴 1,640만ha



순이다. 인증의 가치는 가격 프리미엄보다 시장 접근에 있다. 유럽과 북미의 대형 바이어와 공공조달은 인증 목재를 기본 조건으로 요구하며, 소규모 산주는 조합 단위의 그룹 인증으로 비용을 나눈다.

[9]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각국 산림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하는 국제 체계.

[10] 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회의 국제 산림인증 체계.

[11] Emissions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 뉴질랜드 ETS의 배출권 단위가 NZU(New Zealand Unit)이다.

[12] Family Forest Carbon Program. 미국산림재단과 자연보호협회가 운영하는 가족산림 탄소 프로그램.

[13] Pago por Servicios Ambientales. 코스타리카의 생태계서비스 지불 제도. 영어로는 PES(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14] Klimaangepasstes Waldmanagement. 독일 연방정부의 기후적응 산림경영 지원 제도.

[15] Carbon Removals and Carbon Farming Regulation. EU 탄소제거·탄소농업 인증 프레임워크, Regulation (EU) 2024/3012.

탄소

뉴질랜드는 2008년 산림을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해 1990년 이후 조림한 산림의 흡수량을 배출권(NZU)으로 거래하게 했고, 등록비는 2026년 7월부터 ha당 10.28뉴질랜드달러이다. 일본은 J-크레딧 제도 안에 산림 부문을 두어 간벌 등으로 늘어난 흡수량을 기업에 판다. 미국의 가족산림 탄소 프로그램(FFCP)은 30에이커(약 12ha) 이상의 산주와 20년 계약을 맺고 경영계획과 산림기술자를 붙여 주며, 2025년 12월 첫 크레딧을 발행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

산림이 주는 물·탄소·생물다양성에 정부가 직접 값을 치른다. 코스타리카가 1996년 산림법으로 시작해 30년째 운영하고, 일본은 2024년부터 국민 1인당 연 1,000엔의 산림환경세를 걷어 지자체의 방치림 정비에 쓰며, 독일은 2022년부터 기후적응 산림경영 기준을 지키는 산주에게 ha당 지급한다. 한국의 임업직불제도 이 계열이다.



규제

EUDR은 목재·펄프·종이를 포함한 7개 상품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이 없었음을 실사로 증명하게 하고, 생산지의 지리위치 좌표를 요구한다. 두 차례 연기 끝에 대기업은 2026년 12월 30일, 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5월 유럽위원회는 가족을 대상에서 빼는 간소화안을 내면서도 시행 일정은 유지했다. EU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RCF)는 2024년 11월 채택됐고 2026년 7월 조림 방법론이 확정돼, 산림 탄소 크레딧의 EU 공식 기준이 생겼다.

유기 임산물

핀란드·중국·잠비아가 유기 야생채취 면적 상위 3개국이다. 나무를 베지 않는 기간에도 숲에서 나는 베리·버섯·약초에 유기 인증을 붙여 수입을 만든다. 한국의 친환경농업법도 산양삼·표고 같은 유기 임산물 인증을 두고 있다.

[info] 이시도르 박사의 Insight Box

다섯 흐름의 입장권은 하나로 같다. 경영계획과 기록이다. 인증은 경영계획 없이 받을 수 없고, 탄소 크레딧은 기준선(baseline)과 모니터링 기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생태계서비스 지불은 계약 조건의 이행을 증명해야 하고, EUDR은 좌표와 벌채 이력을 묻는다. 미국 가족산림 탄소 프로그램이 참여 산주에게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돈이 아니라 경영계획과 산림기술자라는 사실이 이를 보여 준다. 한국 산주가 오늘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도 같다.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고 임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것이 다섯 시장 모두의 첫 관문이다.

사례 깊이 보기: 핀란드·일본·미국·코스타리카·독일

다섯 나라의 제도를 “산주에게 무엇이 돈이 되었고 조건은 무엇이었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해외 사례별 산주의 수익과 조건

나라·제도	산주가 받는 것	조건	성과(기준 시점)
핀란드·사유림 경영	입목 판매수입	조합 경영, 그룹인증	2025년 37억 유로, 산주 62만명
일본·산림환경세	방치림 정비 대행	시정촌에 경영 위탁	6년간 21만ha 정비(2024)
미국·FFCP	20년지급, 경영계획	30에이커 이상	1,500명·5,600만 달러 (2026)
코스타리카·PSA	보호 ha당 연 2만 1천 콜론	2~300ha, 5년 계약	1997년 이래 30년 운영
독일·KWM	기준 이행에 ha당 지급	기후적응 기준 약정	170만ha·1.46억 유로 (2025)

(출처: Luke(2026.5), Forest.fi, 林野庁, American Forest Foundation, ONF(2025 ~ 2026), FNR(2026.3))

핀란드

산림의 60%를 개인과 가족이 가지고 있고, 2ha 이상 산림 34만 4천 필지의 평균은 30.5ha이다. 핀란드 자연자원연구소(Luke)에 따르면 2025년 입목 판매수입은 37억 유로로 사상 최고였고, 그중 31억 유로(84%)가 사유림의 것이다. 산주 개인이 시장을 상대하지 않는다. 지역 산주

조합이 벌채 계획·입찰·인증을 대행하고, 산주는 목재를 팔 때 조합의 경쟁 입찰로 가격을 받는다. 한국 산주와 핀란드 산주의 차이는 산의 크기보다 산과 시장 사이에 조합이 있느냐이다.

일본

한국과 같은 소규모·고령·부재 산주 구조에서 나온 해법이다. 2019년 도입한 산림경영관리제도는 스스로 경영할 수 없는 산주가 시정촌에 경영을 위탁하게 하고, 채산성이 있으면 시정촌이 임업 경영체에 재위탁하며 없으면 시정촌이 직접 정비한다. 정비 재원이 2024년부터 걷는 산림환경세(국민 1인당 연 1,000엔)이다. 임야청 집계로 2019 ~ 2024년 6년간 21만ha를 정비했고 1,160개 시정촌이 118만ha의 산주에게 의향을 물었으며, 답한 산주의 약 40%가 위탁을 원했다. 산주가 받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방치한 산이 관리되는 것이다.





미국

미국산림재단(American Forest Foundation)과 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가 운영하는 가족산림 탄소 프로그램은 대기업의 탄소 시장을 소규모 산주에게 연결했다. 20개 주에서 30에이커 이상의 자연림을 가진 산주가 20년간 개선 경영을 약속하면 돈과 경영계획과 산림기술자를 받는다. 2026년 기준 산주 1,500명 이상, 21만 에이커 이상이 등록했고 누적 지급은 5,600만 달러를 넘었으며, 2025년 12월 아웃도어 기업 REI가 첫 크레딧을 샀다.

코스타리카

1996년 산림법 7575호로 생태계서비스 지불(PSA)을 시작해 연료세를 재원으로 국가산림금융기금(FONAFIFO)이 운영한다. 국가산림청(ONF)이 공개한 2025~2026년 단가는 산림 보호 ha당 10만 5천 콜론(5년 계약, 매년 20% 지급, 연 환산 약 40달러)이고 수자원 보호를 더하면 18만 5천 콜론이며, 자생종 조림은 ha당 132만 5천 콜론을 16년에 걸쳐 준다. 1980년대 초 17%까지 떨어졌던 산림 피복률이 국토의 절반 이상으로 회복된 것은 이 제도가 30년간 이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독일

2022년 11월 시작한 기후적응 산림경영(KWM)은 활엽수 비중 확대, 자연 갱신, 고사목 유지 같은 기후적응 기준을 지키는 산주에게 면적당 지급한다. 재생가능자원청(FNR)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170만ha 이상이 지원을 받아 사유림·공유림의 21%를 넘었고, 산주 8,700명에게 2025년 한 해 1억 4,600만 유로가 지급됐다. ha당 평균 약 86유로이다.

[info] 이시도르 박사의 Insight Box

단가만 보면 한국의 임업직불금은 세계 상위이다. 2026년 면적직불금은 2ha 이하 ha당 94만 원(약 670달러)으로 코스타리카의 산림 보호 단가(연 약 40달러)의 17배, 독일의 평균(약 86유로)의 7배이다. 그런데 2024년 지급 면적은 6만 5천ha·502억 원으로 사유림의 1.6%에 그친다. 독일은 3년 만에 사유림·공유림의 21%를 채웠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진입 조건과 안내이다.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 등록과 종사 요건을 전제로 하고, 등록·신청·경영계획을 산주 혼자 해내야 한다. 일본이 시정촌을, 핀란드가 조합을, 미국이 산림기술자를 산주 곁에 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제도: 부품은 있고 조립이 없다



한국 산림은 629만ha로 국토의 62.6%이고 그중 66%가 사유림이다. ha당 임목축적은 2020년 165m³이고 31년생 이상의 숲이 81.2%로 수확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목재자급률은 2023년 18.6%이고 임도밀도는 ha당 3.66m로 일본(13m)·독일(46m)에 크게 못 미친다. 산은 자랐는데 꺼내 쓰는 길이 없다.

제도는 대부분 갖춰져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연간 인증량이 2022년 2만 1천t에서 2024년 9만 6천t으로 두 해 만에 4.5배가 된 것은 수요가 있다는 신호이다. 산림청은 2024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와 협약을 맺어 기업 수요를 연결하기 시작했다. 한국산림인증제도는 2026년 7월 기준 71만ha를 인증했으나 대부분 국유림과 대형 조직이고, 소규모 사유림의 그룹인증은 시작 단계이다.

EUDR은 한국의 목재·가구·종이 수출 기업에 2026년

말부터 적용되며, 한국임업진흥원이 2024년 10월 설명회를 열고 산림청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로 대응하고 있다. 국산재를 쓰는 수출 기업은 국내 산주의 벌채 좌표와 인가된 경영계획을 실사 문서로 제출해야 하므로, 산주의 기록이 곧 수출 기업의 서류가 된다. 국산재 수요를 27%로 늘리려는 정책과 EUDR의 실사 요구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계획되고 기록된 벌채의 목재가 팔린다.

제도와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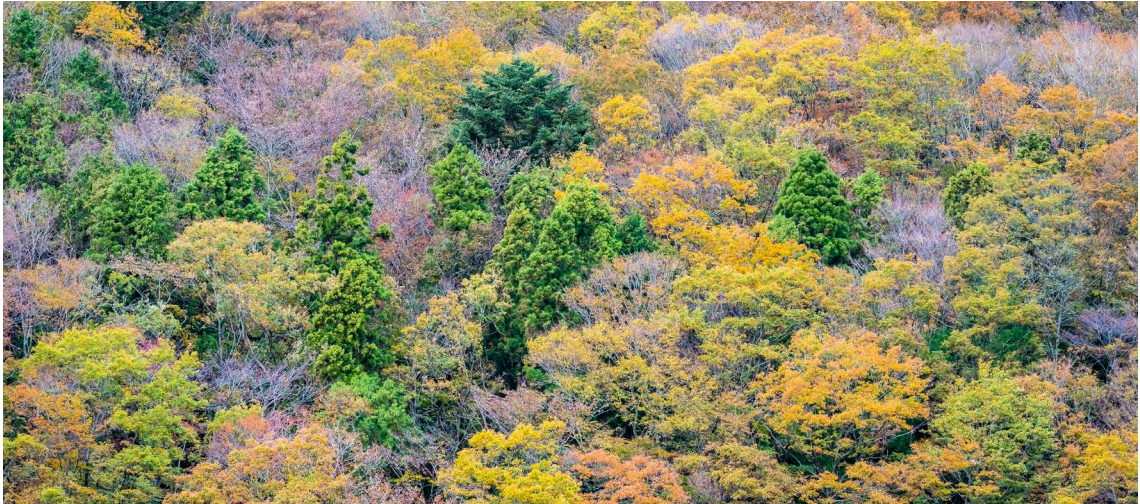
[표4] 한국의 지속가능 임업 제도와 실적

제도	내용	실적(기준 시점)
임업직불제 (2022~)	소규모 130만 원, 면적 ha당 70~94만 원	2024년 6만 5천ha·502억원
산림탄소 상쇄제도	산림경영·조림 흡수량 인증·거래	630건·14만 3천t (2024.9)
산림인증 (KFCC)	PEFC 상호인증, 산림경영·CoC ^[16]	17개 조직·71만 ha(2026.7)
유기 임산물 인증	친환경농어업법, 산양삼·표고 등	통계는 친환경인증관리 시스템 조회
벌채·경영	모두베기 30ha 상한, 경영계획 인가	자급률 18.6%(2023) → 27%(2029)

(출처: L산림청 공고 제2026-101호, 산림청 202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2025.1), KFCC,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5))

[16] Chain of Custody. 임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관리 연쇄 인증.

산주·인증기관·정책에의 시사점



산주에게.

1. 산림경영계획을 세우고 임업경영체로 등록하라.

임업직불금·탄소상쇄·인증·EUDR 실사 모두의 첫 관문이다. 산림조합의 경영계획 대행을 이용한다.

2. 혼자 시장을 상대하지 말라.

핀란드 산주는 조합으로, 일본 산주는 시정촌 위탁으로, 미국 산주는 프로그램의 산림기술자로 시장에 나간다. 산림조합의 위탁 경영과 그룹인증을 먼저 검토한다.

3. 벌채를 계획의 일부로 두라.

지속가능한 임업은 베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베는 것이다. 30ha 상한과 심의 절차 안에서 순환벌채를 경영계획에 넣고, 벌채 이력과 좌표를 기록한다.

4. 베지 않는 기간의 수입을 만들라.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 유기 임산물 전환, 임업직불금 신청은 벌기령을 기다리는 동안의 수입이다.

인증기관에게.

소규모 사유림을 위한 그룹인증 모델과 산림탄소상쇄의 검증 역량이 향후 수요의 중심이다. EU CRCF의 조림 방법론이 2026년 7월 확정됐으므로 국내 산림 탄소 크레딧을 EU 기준과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책 담당자에게.

한국의 임업직불 단가는 세계 상위이나 지금 면적은 사유림의 1.6%이다. 일본의 산림경영관리제도처럼 부재·고령 산주의 산을 지자체나 산림조합이 위탁받아 경영하는 경로를 넓히고, 경영계획 수립·등록·신청을 한 창구에서 대행하게 하는 것이 단가 인상보다 효과가 크다. 임도밀도를 높이지 않으면 목재자급률 27%는 산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달성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25」, 2025. doi.org/10.4060/cd6709en
- PEFC International, 「PEFC Global Statistics」, 2026.3; PEFC-FSC, 「Double Certification PEFC and FSC – mid 2024」, 2024.
- 유럽연합, Regulation (EU) 2023/1115(EUDR) 및 2025~2026년 적용 연기·간소화 결정; Regulation (EU) 2024/3012(CRCF) 및 2026.7 탄소농업 방법론 위임규정.
- Montreal Process, 「Criteria and Indicators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Temperate and Boreal Forests」, 2015; UN, 「Non-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all types of forests」, A/RES/62/98, 2007.
- FiBL-IFOAM – Organics International,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26」, 2026.2.
- Luke(핀란드 자연자원연구소), 「Stumpage earnings 2025」, 2026.5.6; Finnish Forest Association, 「Resources and ownership」, forest.fi
- 林野庁, 「森林環境税・森林環境譲与税」 및 「森林経営管理制度」, 2026; American Forest Foundation, 「Family Forest Carbon Program」, 2026.
- ONF(코스타리카 국가산림청), 「Monto por modalidad PSA 2025-2026」; FNR(독일 재생가능자원청), 「Klimaangepasstes Waldmanagement geht ins neue Jahr」, 2026.3.2.
- 산림청, 「2025년 전국 산주 현황」, 2026.7; 「2026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공고 제2026-101호), 2026.2; 「202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25.1;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5~2029)」, 2025.1;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 추진전략」, 2021.12.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인증 현황, 2026.7; EUDR 설명회 자료, 2024.10.

본 자료는 이시도로 지속가능연구소가 공개 정보와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특정 사업·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닙니다. 인용된 제도·단가·통계는 각 출처의 발행 시점 기준이며, 환율·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간 지속가능산업 인사이드

발행일 | 2026년 10월 15일 (제22호 / 통권 31호)

창간일 | 2025년 9월 1일

발행인·편집인 | 유병덕

발행처 |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주식회사 부설연구소

주소 | 충북 청주시 봉명로 31 T1타워 1007호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 2021-000006 · 2021년 7월 20일

편집 | 레이블

오타자 및 제보처 | isidor@isidor.kr

전화 | 043-900-9792

ISSN 3140-5401

© 이시도르연구소



◀ 지난 인사이트 보기(QR 스캔)

지속가능산업 인사이트

- 제 1 호 바이오차의 기술, 효과, 정책 전망
- 제 2 호 유럽연합 RED를 통한 순환경제의 고찰
- 제 3 호 지속가능한 항공 산업을 위한 CORSIA
- 제 4 호 RFNBO: 농촌 태양광발전을 잘 활용하는 방법
- 제 5 호 폐식용유(UCO): 재생 연료 시장의 주축
- 제 6 호 생물다양성 오프셋: 농촌과 기업의 상생 모델
- 제 7 호 EUDR: 유럽연합의 숲 지키기와 우리의 대응
- 제 8 호 FSVP: 미국행 농수산물 수출의 위협과 기회
- 제 9 호 농수산업에도 요구되는 사회적 기준
- 제10호 2026 지속가능산업 대전망: '대응'을 넘어 '선점'으로
- 제11호 'K-ESG 가이드라인' VS 'GRI Standards'
- 제12호 페타이어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 제13호 미국의 유기농부들은 왜 떠나는가?
- 제14호 GHG Protocol LSR: 농식품·에너지 기업의 필수 기준 '토지·제거'
- 제15호 에코디자인 규정(ESPR): EU 순환경제 구축의 강력한 제도
- 제16호 양식업계가 알아야 할 ESG 공시 기준
- 제17호 GRI 101: 자연 공시의 새로운 기준
- 제18호 중국의 온실가스 신규 규정이 주는 시사점과 우리산업에 미칠 영향
- 제19호 제품 탄소회계의 글로벌 통합: ISO와 GHG Protocol이 그리는 단일 표준의 길
- 제20호 ISCC PLUS와 섬유 산업: Bio·Bio-circular·Circular 인증으로 가는 길
- 제21호 Rainforest Alliance의 진화 "재생농업"
- 제22호 GRI 보고 실무 — Sector Standards와 Content Index
- 제23호 탄소에 국경이 생긴다 — EU CBAM과 한국 산업의 과제
- 제24호 격변기의 지속가능 연료 인증: ISCC 제16회 글로벌 컨퍼런스
- 제25호 무엇으로 항해할 것인가 — 대체 해양연료 전환과 인증의 관문
- 제26호 포장에도 여권이 필요하다: EU PPWR과 한국 수출산업의 준비
- 제27호 에너지와 농촌의 지속가능 설계: 햇빛소득마을
- 제28호 규칙은 있고 시장은 없다: RFNBO 인증과 e-연료 시장 창출
- 제29호 감속제가 없는 원자로: 자율 AI의 위험과 한국의 거버넌스 선택
- 제30호 식품 포장도 심사받는다: EU 포장 규제와 수출 공급망의 문서 체계
- 제31호 숲은 배면서 지킨다: 지속가능한 임업의 세계적 흐름과 산주의 선택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ISIDOR SUSTAINABILITY RESEARCH INSTITUTE

본소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덕로 1358 | T.043-845-9792
 청주지소 충북 청주시 봉명로 31 T1타워 1007호 | T.043-900-9792
 연구소 경북 영주시 대학로86번길 14, 2층

www.isidor.kr



ISSN 3140-5401



42

비매품